

[세미나]

기본소득 바로보기

- 일시: 2020년 6월 27일 (토) 오후 4시
- 장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 주최: 자유기업원, 자유와 지성
- 사회: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 ◆ 백해무익 기본소득, 내 주위 사람 설득하기
강지원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 ◆ 기본소득의 명분론과 실리론
김영준 SFL KOREA 대표
- ◆ 기본소득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고찰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 ◆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옹호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1]

백해무익 기본소득, 내 주위 사람 설득하기

강지원 강릉원주대학교 학생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다. 코로나 사태 이전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포퓰리즘, 심지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손가락질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역병의 창궐과 더불어 비밀상적인 정책이 난무하는 오늘날, 기본소득이야말로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야 막론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시행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절반 정도로 양분되어 있지만 조금씩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는 여론을 되돌리는 것이 악법 저지의 우선적 과업이 될 것이다. 사실 어느 각도로 보아도 상황들이 너무나 부정적인지라, 논의에 가담하여 반대의 가치를 높이 든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는 우리가 압승을 확신하면서 이 노릇을 해왔겠는가? 그저 내 주위 사람 한 명이라도 진실의 편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소망과 함께 두박이걸음을 걷는 수밖에. 그래서 본 발제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주위 사람을,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설득해 보는 지극히 순수한 상황을 가정한다. 기본소득에 친화적이거나, 입장이 불분명한 사람을 ‘자유주의자’로 만드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전략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 되면 되게 한다.’가 아니라 ‘안 돼도 일단 해봐야 한다.’의 정신일 것이다.

일단 요즘 사람들은 적어도 기본소득이 결코 공짜는 아니며 세금이나 부채로 충당된다는 사실 정도는 다소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에 앞서, 국가는 그 자신의 독립적인 재원이 없으며 무언가를 친절하게 베푸는 손을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무언가를 폭압적으로 빼앗는 손이 필요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가장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이다. 당연하게도 여기서 ‘폭압적 약탈’의 개념 속에는 과세와 통화팽창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주 이야기할 법한 것들은 재정 여건이나 노동공급 감소 등의 문제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이다. 기본소득 지지 세력에서 재정이 충분하다거나 노동공급이 감소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왜곡된 주장을 펼 때 이를 경제학적으로 잘 반박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시적인 대화에서는 이 주제들을 논하는 것이 그다지 적절치 않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경제학적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들 “그래서? 그럼 이 난국에 돈 없고 일 없는 사람들은 몽땅 굶어 죽이게?”라는 한 마디면 열렸던 강론이 무색해지기 십상이다. 이는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어느 푸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정치경제학에서는 2+2가 4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그렇게 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친다. ‘그것은 아주 분명해서 지루하다.’ 그 후

그들은 마치 당신이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 것처럼 투표한다.” 정말이지 작금의 상황과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푸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소득이 단순히 ‘부작용이나 심지어는 파산의 위험성을 지닌 정책’이라는 이야기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아주 근본적인 오류 위에 서 있으며 애당초 목표했던 바를 조금도 이뤄낼 수 없는 백해무익의 시스템이라는 사실, 그리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정책의 이면 속에는 인륜적 가치들을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파괴적인 속성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논하는 것일 터이다.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오류라 함은 대표적으로 소득과 노동을 분리시켜버린 것이다. 소득, 먹고 살만 한 여력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회적으로 기본값이어야 하는가? 적어도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노동 없이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게 아니다. 진실로 어느 누군가는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만 ‘소득’이라는 것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다. 바스티아의 말대로 인간은 결핍의 고통이나 노동의 결핍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바로 이 자명한 진리를 간과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 지지 세력도 그 사실을 겉으로 내뱉지 않을 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바스티아도 그 두 가지 고통을 모두 피할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노동 산물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노동의 고통은 타인에게 지우고 노동의 결과물인 소득은 자신이 취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것이다. 각자가 노동하여 그 소득을 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버리고,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되 일부 재수 없는 이들만이 과잉노동이라는 재앙을 뒤집어쓰게 되는, 그야말로 폭탄게임이 시작된다. 대화가 이쯤 왔으면 결정타를 날려 줄 필요가 있다. “만일 당신이 노동은 타인에게 떠넘기고 소득은 내가 꺼안는 사실상 노예제와도 같은 그 시스템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좌파다. 그리고 나는 그러한 좌파적 사고방식이 저열하고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자증세의 효력이나 정당성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부자증세는 자본 축적을 위축시키고 고용 지출을 감소시켜 결국 저소득층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깨우쳐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좌파적 통념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면 좋다. 적어도 순수 자유시장에서 부자는 빈자들의 뭍을 착취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부자가 된다는 논의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을 무너뜨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삼성과 현대가 굴지의 대기업이 되어 막대한 부를 일군 동안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소득 수준 역시 눈부신 성장을 이룬 역사가 입증하듯,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착취 때문이 아니라 자유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와 혁신 덕분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대화 상대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그를 ‘기본소득 반대자’를 넘어 완전한 ‘시장자유주의자’로 탈바꿈시킨 셈이다.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기본소득은 빈자들의 극심한 빈곤을 방지, 또는 퇴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앞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소득은 그 목표를 이룩할 수 없고 진실로 빈곤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선량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임을 강조해야 한다. 결국 빈자를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사재’랄 것도 없는 국가가 아니라 개개인이다. 국가 주도의 재분배와 달리 개인의 자선은 자본을 위축시키지도 않으며 보다 효율적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국가의 강제적 재분배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기부금이 모이지 않아 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쩌면 미제스의 글에서도 그런 암시를 받을 수 있다. “평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항상 그들 자신의 소비 능력 증가다. 정치적 요구로서 평등의 원리를 지지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득을 보다 덜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않는다.” 이 예리한 고언을 들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성찰해 볼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미제스의 말에 불쾌해하며 자신은 진정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평등을 지향했음을 확언한다면, 옳거나 좋다. 그는 자유주의 산파술에 걸려 들었다. 이렇게 말해주자. “기본소득이 없어도, 국가의 강제적 재분배가 없어도 우리에게겐 당신이 있다. 당신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정도로 빈자들의 처지를 염려하는 선량한 시민이다. 그러니 그런 당신이라면 기본소득이 없어도, 국가의 재분배 시스템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당신은 미제스의 저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선량한 시민들의 합인 이 사회는, 결국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빈곤과 맞서 싸울 것이다.”

[#2]

기본소득의 명분론과 실리론

김영준 SFL KOREA 대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구성원 전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인 소득’이라고 정의한다면, 기본소득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이를 크게 ‘명분론’과 ‘실리론’으로 나누어 반박해보고자 한다.

생존권과 기본소득

생존권이라 함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이어나갈 권리를 말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되기도 한다.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삶을 이어나가려면 물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생존권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면 응당 누려야 하는 성격의 권리 중 하나로 인정한다고 하면,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즉 시장경제는 이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점이 역사적으로 명백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존권에 관한 기본소득론자의 주장이다.

시장경제에 대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기본소득론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해²⁾는 차치하고서도, 생존권이 ‘인간이라면 응당 누려야 하는 성격의 권리’가 맞긴 한 것인지 이미 의심스럽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의 조건들은 희소성을 가진다. 희소성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취하기에는 그것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희생을 해야 한다. 즉, 생존권과 소유권은 충돌하는 성격의 것이다. 어느 한 쪽을 보편인권으로 정했을 때, 다른 한 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이란?」 참조.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definition/>

2) 위의 글, “...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겠다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 ...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80년대 이후에, 한국으로 한정하면 1997년 이후에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불안정노동체제와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본격화이다. ...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한편으로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다른 한편으로 아예 일자리가 없어서 삶의 불안에 시달린다. 이런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1980년대 이후 자본-노동 사이의 힘의 관계가 바뀐 데 있다. 물론 여기에 더해 기계화와 자동화가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특히 기계화와 자동화는 점점 고용 자체를 줄이는 경향을 띤다.”

한 때는 ‘신자유주의’ 내지는 ‘~자본주의’로 지칭되는 무언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듯 엄밀함을 꾀하면서, 다른 때는 바로 그 ‘신자유주의’를 본래적 의미의 ‘시장경제’와 교묘하게 등치시켜 자유주의 경제학이 실패했다는 듯 꾸미는 화법은, 한국의 반-자본주의론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소유권 역시 그것에 대한 완전무결한 정당화 논리는 이제까지 등장한 바 없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보편인권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꽤 많은 기본소득론자들이 진지하게 사적소유의 철폐를 함께 이야기한다. 기본소득제를 사적소유 철폐를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적소유 철폐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타협적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소유권은 시장경제가 존속하도록 하는 근간에 해당하는 권리이고, 이것이 보편인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무너져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생존권 개념을 들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왔던,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악마화 해왔던 반-자본주의적 주장들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기본소득론자의 마음속에 깔려 있는 그러한 심리는, 이들이 애용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를 향한 경멸적 용어에서 잘 드러난다.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공화주의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소극적 자유의 증대를 목표로하기보다는, 집단주의적인 관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자유의 증대를 목표로하는 사상이다. 그러한 목표 아래에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합리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여 민주제와 주로 결합되어 왔고, 그런 측면에서 개개인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공화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개개인이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논쟁하고 판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으려면 충족되어야 하는 물질적, 정신적 조건이 있고, 기본소득이 최소한 물질적 조건은,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조건까지도 해소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정확히 말하면 기본소득과 같은 것을 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체가 임의로 내린 어떤 결정사항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야말로, 사람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동체의 이익,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떨어질 기본소득의 액수를 늘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이성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수단을 통해 다른 이의 부를 강탈해오는 것이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는 사람들

이 결코 공공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수단을 이용한 무혈의 투쟁 속에서 남의 것을 뺏어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공화주의는 정치의 이름으로 부를 강탈하는 행위가 불가능할 때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소유권으로서의 기본소득

자발적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활동이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존속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그렇게 축적된 부에 대한 권리를 부분적으로는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부를 축적하는 행위가 해당 공동체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직관적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자발적 거래는 이미 그 자체로 부를 축적한 데 대한 대가를 판매자가 충분히 지불하는 거래다. 판매자는 그런 거래를 통해서 자신과 거래한 구매자에게 기여한 셈이기도 하지만, 그런 구매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공동체에 기여한 셈이기도 하다. 그렇게 부를 축적한 이들에게 공동체의 존속에 기여한 데 대한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발적 거래에서의 판매자에게 이중지불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주된 구매자로서 대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된 판매자로서 많은 부를 축적한 이들을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로 착취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실리론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주장은 모두 기본소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건 그것과 무관하게, 응당 시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명분론’에 해당한다. 그러한 명분론 말고도 기본소득론자들은 ‘실리론’ 역시 제시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흔히 자본주의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것이 대안적 경제체제가 되어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가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인해 끊임없이 공황과 환경문제를 낳게 된다는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

공황과 원인을 자본주의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잘못 인식한 것이다. 공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가들의 과오투자이고, 그러한 과오투자를 거대한 규모로 조장하여 공황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조정과정에 경제가 직면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간섭임을 이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밝힌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공황 역시 반-자본주의론자들은 그 원인을 시장경제에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학파 경기변동이론이 설명해온 대로 각종 보조금과 감면특혜와 더불어 시행된 미국 정부의 통화팽창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환경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하다. 우선

대량생산으로 특징지어지는 '산업화'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통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산업화의 특징이 자본주의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도 친환경적인 생산을 위한 과학적 지식이 충분히 발달하고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을 세우고 생산량을 늘리다보면 환경문제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자연의 자정능력과 인간의 인위적 정화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서든,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따라서든 중앙의 계획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시장경제보다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저명한 과학자들조차 자신들의 기술이 환경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그 어떤 경제체제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질서가 시장경제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공황과 환경오염이라는 시대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희망적인 기대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있지 않는 한, 생산과 소비는 언젠가 다시 오늘날의 수준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통화팽창을 계속하는 한, 또 인위적 정화능력이 오염의 속도를 상쇄할 정도로 향상되지 않는 한, 공황과 환경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3]

기본소득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고찰: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과 현대통화이론을 중심으로

박진우 한양대학교 학생

거시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는 총수요 확대를 통한 저성장 국면 탈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총수요 확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통화정책이 선호되어 왔다. 재정정책과 달리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염려가 적은 데다, 내부 시차가 짧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경제 환경이 도래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핵심 근거는 래리 서머스 교수의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설에 있다.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이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총수요 부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이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증가로 인해 소비가 둔화하고, 성장 기회 감퇴에 따라 투자가 둔화한다. 따라서 자연이자율(=잠재GDP 수준 하에서의 실질이자율)이 결정되는 대부 자금시장에서 저축 공급이 투자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도 남아돌아, 자연이자율이 음수가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실질이자율이 자연이자율에 비해 낮아야 한다. 자연이자율이 음수가 될 때, 통화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실질이자율을 더 큰 절댓값의 음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실질이자율이 아닌 명목이자율이며, 명목이자율은 0의 이자율 하한을 갖는다. 피셔방정식($r = i - \pi^e$)을 고려할 때, 0의 하한에서 실질이자율을 필요한 크기의 음수로 만들 방법은 기대인플레이션을 크게 높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0의 하한에 도달할 정도로 침체된 경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통화정책이 무력화 된다.

그래서 대두한 것이 현대통화이론이다. 통화정책을 별도로 수행하지 말고, 재정지출 및 이전지출을 화폐 발행으로 조달하여 유동성을 공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다 인플레이션 등 경기 과열이 본격화 하면, 조세나 국채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면 되는 게 현대통화이론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공권력을 가진 정부는 자신이 발행하는 화폐로만 조세를 납부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무력화와 현대통화이론의 등장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 장기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논의된다면, 현대통화이론의 도입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주지하다시피 막대한 자원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통화이론은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준다. 기본소득이라는 이전지출을 조세가 아닌 화폐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통화이론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보편 증세가 필수적인데, 기본소득 도입을 원하는 좌파들이 이런 방식의 자원 마련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안타깝게도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은 연역 논리상 잘못된 이론이다. 또한 현대통화이론에 근거하여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기존의 통화정책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논의해보자.

인구가 고령화 되어 성장 기회가 지속적으로 감퇴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많아져 식량이 부족해지므로 대기근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구론의 현대판이다. 인구론이 퇴출된 이유는 농토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농화학과 농기계의 발전 및 재배 기술 혁신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이 흔히 범하는 'ceteris paribus' 오류의 고전적 예시다.

방해받지 않는 자유 시장(unhampered market)을 가정해보자. 인구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젊은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가는 나이든 노동자의 생산성을 보완할 자본재를 개발하여 투입한다. 노동시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유보임금과 자본재 투입 비용이 기업가에게 정상 이윤 이상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이러한 과정은 계속된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동자의 생산가능연령도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인구가 고령화 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 기회를 감퇴시키지 않는다.

구조적 장기침체 현상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 시장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을 멋대로 규제하고, 산업 혁신과 생산 시설 건립을 까다롭게 하며, 공급 규제로 주택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의 과도한 확장 통화정책이 사회적 희소 자원을 낭비하는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는 것도 한 몫 한다. 지나친 확장 재정정책 역시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에 자원을 흡수시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이처럼 시장을 방해하는 (hampering) 요소들이 구조적 장기침체를 야기하는 것이지, 시장에 내재하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적 장기침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장기침체를 기본소득을 제공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막는 각종 반시장적인 제도를 혁파하는 게 정공법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와중에 통화 증발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기껏해야 인플레이션 외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현대통화이론 지지자들은 구조적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에서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통해 대규모 경기 부양을 실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장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장기침체로 인해 미래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예비적 목적의 화폐 저장(hoarding)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통한 경기 부양은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져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고, 자원을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으로 흡수시키는 작용을 한다. 결국 재정적자의 화폐화는 장기침체의 원인인 것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추가 발행된 통화를 정부와 기업가가 아닌 가계에 직접 쥐어준다는 점에서 재정적자의 화폐화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거나, 자원이 공공부문에 집중되는 등의 해악은 분명 적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유보임금이 높아져 균형 고용량과 투자가 감소하고, 결국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반시장적 제도들이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한, 장기침체의 탈피는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이 화폐 저장이 아닌 실제 소비로 이어진다면,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기본소득의 경우가 재정적자의 화폐화에 비해 훨씬 우려된다. 항구적인 고정 화폐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화폐 저장보다는 소비를 선호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은 가속화한다.

[#4]

자유주의 진영의 기본소득 옹호

조범수 자유기업원 인턴

보편적 기본소득제도(universal basic income)는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의 일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급진적인 좌익 진영의 어젠다로 인식되곤 하지만, 사실 적지 않은 자유주의자들도 기본소득제도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 제도를 인정하는 신자유주의 진영,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동정적 태도를 특징으로 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neoclassical liberalism) 진영¹⁾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다. 기본소득제가 자유주의적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복지 제도라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자유주의 진영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제 옹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현대 국가의 기존 복지 제도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비효율을 양산하는데, 기본소득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샘 보우먼(Sam Bowman)이 애덤스미스연구소에 게재한 칼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옹호론>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빈곤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복지 제도의 복잡성을 해소하며, 여타 개혁을 촉진한다는 주장이다.

보우먼이 내세운 옹호론의 핵심적 문제는 바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복지 제도의 복잡성 해소’와 동격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데에 있다. 이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기존 복지제도의 획기적 간소화가 전제되는 것임을 충분히 강조하고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는 단번에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그것이 기존 복지 제도를 ‘대체’해야만 복잡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단순히 도입되기만 한다면, 기본소득제는 정부의 씬씀이만 키우고 외려 이미 비대한 복지 제도의 몸집을 불리는 결과만 낳게 된다. 기본소득제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고려했을 때, 기성 복지 레짐의 철폐 혹은 획기적 축소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도입은 가히 재앙적일 것이다.

물론 기존 제도의 철폐 혹은 간소화를 분명히 전제하고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다. 이런 경우, 옹호론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자인 맷 즈볼린스키(Matt Zwolinski) 교수가 리버테리언리즘 사이트에 게

1) 신고전적 자유주의(neoclassical liberalism)은 평등주의적 성향을 띠는 자유주의의 분파로, 고전적 자유주의를 토대로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동정을 특징으로 하여 ‘지나치게 동정적인(bleeding heart)’ 자유주의라고 비꼬아 부르기도 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이들 단체의 이름도 “Bleeding Heart Libertarian(BHL)”이 되었다.

재한 칼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옹호론>의 일부 내용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 사회보장제도는 값비싸고 복잡한 개판이다. ... 빈곤 퇴치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엄청난 규모의 관료와 무지하게 복잡다단한 규칙들은 덤으로 따라온다. 정부의 규모와 영역을 줄이고 싶다면, 그러한 제도를 모두 제거하고 컴퓨터 한 대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단순한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대한 관료를 없애야 빈곤층에게 돈을 더 쥐어줄 수 있고, 동시에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윈-윈인 셈이다...”

케이토 연구소의 마이클 태너(Michael Tanner) 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연방 정부가 126개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지출하고 있는 예산은 최소 6680억달러(804조원)이다. 여기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2840억달러(341조원)을 더하면, 빈곤층 시민 1인당 20,610달러(2480만) 수준의 규모다. 여기에 복지 정책 하나하나에 의존하는 관료와 규제를 생각하면 복지 레짐의 실질적 지출은 몇 갑절은 더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단순하고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기본소득제는 분명한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기존의 복지 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시행 측면에서 여러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세스 연구소의 안토니 새머로프(Antony Sammeroff)가 지적하듯,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그 나름대로 비대화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제도가 ‘투명한’ 만큼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성 복지제도는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웃집 친구가 자신보다 얼마 만큼의 복지혜택을 더 받거나 덜 받고있는 지를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기본소득제 하에서는 모두가 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받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정치적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연 자유주의 진영이 기본소득제 자체를 의제로 다루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복지 제도의 비효율성과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리 ‘기본소득제’를 논하는 것은 자칫 소위 ‘좌익적’ 기본소득제에만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제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